

‘편견의 벽’ 제대로 허물었는가?

사회와 사상 엮음 「80년대 사회운동 논쟁」을 읽고

전태국

강원대 교수 · 사회학

80년대에 들어와 우리 사회는 일찍이 그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대 변혁을 겪고 있다. 유신독재체제의 붕괴에서 시작되었던 군사파쇼체제의 분해과정은 우리사회 모든 부문을 휩쓰는 총체적인 소용돌이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군사파쇼체제를 지탱하고 있던 분단이데올로기를 비롯하여 각종의 사상적 편견들, 이른바 ‘과거의 강자들’이 모두 이 소용돌이 안으로 휩쓸려 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전반적인 혼돈 속에서 영웅들이 순간적으로 나타났다가는 곧 더 용감하고 더 강력한 경쟁자들에 의해 어둠 속으로 다시 내던져지고 있다. 전례없이 성급하게 원리들이 서로 배제되고, 사상의 영웅들이 서로 격돌하고 있다. 이리하여 80년대의 우리사회는 수세기 동안에 소탕되었던 것보다 더 많은 원리와 영웅들이 소탕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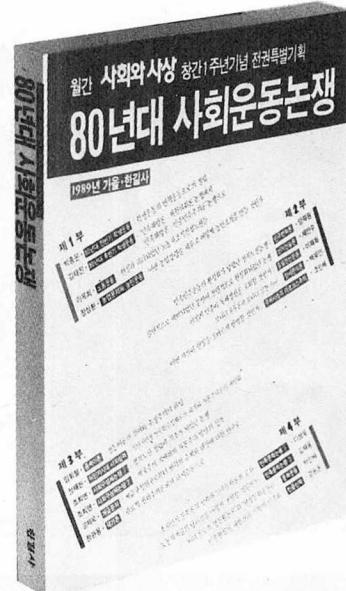
분단이데올로기의 절대적 정신이 분해되는 과정은 곧 이 절대정신을 구성하였던 다양한 부분들이 새롭게 결합되어, 새로운 실체를 구성하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절대정신을 올려먹음에 의해 생명을 영위해왔던 철학 및 문화산업가들이 이제는 이 새로운 결합물에 달려들었다. 그들은 저마다 자기 손에 들어온 ‘철학상품’을 가능한 한 부지런히 판매하고자 한다.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시장은 공급과잉이 되고, 그리하여 상품이 아무리 노력해도 시장에서 잘 팔리지 않게 되자, 장사는 예의 한국적 방식으로 싸구려 물건과 모조품의 생산, 품질의 저하, 상표의 위조 등으로 타락하였다. 경쟁은 마침내 처절한 투쟁으로 변화되었다. 바로 이 투쟁이 지금 우리들에게 대변혁으로서, 그리고 위대한 성과와 업적을 낳은 논쟁으로서 해석되고 찬양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토론문화 定礎 놓은 점은 긍정적

월간『사회와 사상』의 창간 1주년 기념 특별 기획으로 나온 「80년대 사회운동논쟁」은 상술한 맥락으로부터 예외가 되지 않는다. 이 논쟁의 관여자들이 세계를 해석하는 일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를 변혁시키는 것을 자신의 과업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마르크스주의 지식인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그러나 논쟁의 국지적 편협성과 하찮음, 그리고 출속한 철학상품의 ‘떨이 행위’ 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논쟁은 우리사회의 반지성적 반공문화의 횡포 앞에서 공개적 논의가 불가능하였던 주제들을

과감하게 드러냄으로써, 금기와 편견의 벽을 허물고, 자유로운 토론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하나의 초석이 되었음을 높이 평가하는 바이지만, 그러나 품질저하와 상표위조의 타락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긴급하고도 절실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분단시대의 한 산물로서 분단의 성격을 그 구성적 요소로 하고 있다고 보이는 이른바 ‘주체사상’이 분단극복의 이론으로, 심지어는 마르크스사상의 극복인 것으로 간주된다든가, 해방사상으로서의 마르크스사상이 충분히 그리고 침착하게 연구되기 보다는 전략적 사고를 위한 도구로서 왜곡되는 일들이 이 논쟁에서 쉽게 발견되는 것이다.

이 논쟁집은 전체가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는 노동자·농민·청년 학생들의 사회변혁운동에서의 논쟁, 제2부는 변혁운동의 정치노선과 투쟁전술을 둘러싼 논쟁을 주로 다루면서 주체사상과 마르크스주의의 관계도 다루고 있다. 제3부는 한국사회의 성격을 규정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된 논쟁을, 그리고 마지막의 제4부는 문화·예술분야에서의 논쟁을 다루고 있다. 모두 19편의 글과 해설을 담고 있으며, 소위 ‘진보적’ 진영 내부에서 일어난 논쟁만을 싣고 있는 이 논쟁집에 있어서, 필자들 모두에게는 이론의 주체와 수취인의 동일성을 주장하는 사회주의 지식인의 전통적自己理解가 강고하게 뿌리박고 있음을 특징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의 정치적 자아정체는 그들이 생산한 이론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의식과 직접적으로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연속성에 의해 중재되어 있다고 하는 가정을 구성적 요소로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변혁이론’은, 그들 자신의 요구에 따르면, 이러한 프롤레타리아트의 생활세계적 일상경험에서 자신의 토대와 준거, 경험적 원천, 그리고 정당성을 갖는다. 지식인에 의한 노동자의 교육 내지 의식화는 실제로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자기계몽이므로 그 교육은 교리의 주입 이상의 것이다. 이론이 노동자의 경험적 의식과 중재되어 있을 때 비로소 그 이론은 정치적 동일성, 즉 사회주의적 동일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식인의 이론은 노동자의 경험적 계급의식과의 중재고리를 결여해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지식인은 그의 이론적 연구가 순전한 교화인지 아니면 프롤레타리아트의 자기계몽의 계기인지를 결정할 기준을 갖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올바른 계급입장’이 언제나 사회주의 지식인의 이론정치적 논쟁에서



최종적인 호소법정으로 내세워지게 된다.

계급의식의 신화에 대한 맹목적 신봉

일찍이 루카치는 1923년에 「역사와 계급의식」에서 사회주의 지식인의 이러한 전통적 자기이해를 개념화하여 계급의식과 마르크스의 사회이론의 동일성의 테제를 정식화하였다. 루카치에 의하면,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 입장 안에는 자본주의 사회를 총체성으로서 훔뚫어볼 수 있게 하는 지점이 확보된다. 이 지점은 생산력의 발전에 의해 역사적으로 주어진다. 그리하여 프롤레타리아트에게서 처음으로 프롤레타리아트의 해방의 조건과 자본주의 사회의 지향의 이론적으로 인식된 조건이 일치한다. 프롤레타리아트의 정치적 행동지향과 사회이론의 이러한 일치, 인식의 주체와 객체의 이러한 일치는 루카치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이론과 실천의 직접적인 통일을 근거짓는다. 프롤레타리아트는 이론의 주체이자 수취인이다. 주체와 수취인이 동일한 것이다.

루카치가 주장한 프롤레타리아 계급의식과 사회이론의 동일성의 테제, 사회주의의 이론의 주체와 수취인의 동일성의 테제는 그러나 오늘날 근본적으로 반박되지 않을 수 없다. 프롤레타리아트의 역사적 정치적 상태에 적합한 사회이론과 이 프롤레타리아트의 정치의식은 어떤 방식으로도 서로 중재되어 있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프롤레타리아 계급의식의 신화를 계속 신봉하는 것은 오히려 자본의 논리가 고도로 관철되고 있는 우리 현실에 대한 맹목을 의미할 수 있다.

프롤레타리아에의 소속성을 규정하는 것은 이론적 연구가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의식의 면에서 구성되어 있다는 실험적 가정에 더이상

의거해서는 안된다. 프롤레타리아트에의 소속성은 오히려 이론의 운반자의 도덕적 결정의 평면 위에서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유물론적 戰士의 에토스가 강조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이론적 연구가 프롤레타리아에게 존재한다고 가정된 객관적 이해관심에 이론적 연구가 지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론적 연구의 본질적인 현실적 합성의 기준은 투쟁하고 있는 사회집단들의 일반적 이해관심과의 결합에 있다. 이론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가장 진보적인 사회세력들이 취수하고 있는 과제들에 대해 그 이론이 갖는 연관성이다. 투쟁하고 있는 인류의 문제로부터 사고가 멀어진다면, 바로 이것이 지식인에 대한 불신의 근거인 것이다. 사고의 이러한 ‘무관계성’은 판단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신의 동기 때문에 사고의 통제를 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우리사회에서는 임금의존자의 구조 변화(노동귀족 대 룰펜프롤레타리아트)로 인해 이미 통일적이고 상황에 알맞는 계급의식의 형성이 경향으로 방해되고 있다. 프롤레타리아트의 상황이 올바른 인식을 위한 보증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중의 사고와 감정에서 자신의 원칙을 끌어내려는 지식인의 태도는 오히려 스스로 기존체제에 대한 노예적 의존성을 강화하는 셈이다.

사회주의지식인이 간파해선 안될 점

따라서 대중의 자발성을 강조하여 이론적으로 올바른 인식을 위한 궁극적 보증을 곧 그 인식이 경험적으로 존재하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지향에 포섭되는 데서 찾을 수 있다고 믿는 ‘룩셈부르크주의적 지식인’의 원리는 비판받지 않을 수 없다. 프롤레타리아트의 소여의 정치적 상황에 있어서 사회주의 지식인에게 귀속되는 이론적 주체는 바로 프롤레타리아트를 위해서 프롤레타리아 의식으로부터 자신을 거리화해야 한다. 프롤레타리아트의 창조력을 승배하는데서, 그리고 프롤레타리아트에 적응하고 또 프롤레타리아트를 신성화하는 데서 자신의 만족과 안도감을 발견하는 지식인은 이론적 노력을 회피하게 되고 또 대중과의 일시적 대립을 회피함으로써, 오히려 대중을 더욱 눈멀게 하고 더욱 허약하게 만들게 된다는 사실을 간파하는 것이다.